

의 신용등급을 대거 하향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국제통화기금(IMF)은 저금리 기조하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한 기업 부채가 앞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뇌관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 이사장은 “현재 기업 부채가 또 다른 금융위기를 조장하기보다 코로나19로 촉발된 현 사태를 악화시킬 개연성이 아주 크다”라면서 “기업이 수익을 제대로 내기 어려워진 상황에선 빚을 갚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미국과 600억달러 통화 스와프(swap·맞교환) 체결에도 적정 외환 보유액 논란이 일었다.

“현재 외환 보유액은 4000억달러로 2008년 금융위기 당시의 두 배다. 외환 위기가 핵심 문제가 아니어서 위급한 수준은 아니다. 하지만 경제 정책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뒀다. 위기가 장기화해서 기업 도산이 늘고 외국 투자자가 빠져나가고 금융시장의 상황이 나빠지고 경상수지도 악화한다면? 추가로 안전망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기축통화인 엔화 확보를 위해 일본과 통화 스와프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

재정 정책은 어느 수준까지 이뤄져야 하는가. 2차 추경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1차 추경을 집행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2차 추경을 이야기하기엔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올해 512조원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이고 적자 국채 발행도 최고 수준이다. 예비비 등 기존 항목을 조정하면서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국가 신용도를 받쳐주는 최후의 보루가 재정 건전성이다.

재정 집행의 효율성도 보면서 절제된 방향으로 가야 한다.”

정부는 애초 올해 재정 적자를 40조원, 국가 채무 비율은 40.2% 범위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만약 정치권 요구대로 2차 추경이 편성될 경우 국가 채무 비율은 올해 말 43% 안팎으로 늘어날 수 있다.

재정이 쓰여야 하는 곳은.

“코로나19 사태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취약 계층 지원이 필요하다. 경기 활성화 방안에 발맞춘 자금 집행도 중요하다.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이나 대기업까지 직격탄을 맞은 분야에 지원한다는 정부 정책은 긍정적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2조달러 구제금융안에 항공사 지원이 상당 부분 차지한다. 항공·해운·철강 등 주요 기간 산업에 자금 투입이 필요하다. 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적인 정책은 경계해야 한다.”

국민에게 현금을 나눠주는 재난기본소득 논란도 일고 있다.

“1인당 100만원씩 주면 51조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적은 돈이냐. 미국에서 1인당 1000달러를 준다고 모두 따를 수는 없는 법이다. 같은 논리라면 법인세 감축과 같은 미국의 다른 조치는 왜 따르지 않는가. 일본에서도 과거 재난기본소득 명목의 현금을 긴급 지급했는데, 소비가 촉진되지 않았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감세 혜택을 받지 않는 취약 계층을 선별해서 현금을 준다는데, 이것이 훨씬 설득력 있다.”

코로나19가 조기 종식되면 위기가 끝날

까. 한국 경제의 반등 시점은.

“위기 국면을 벗어나는 가장 큰 관건은 다른 경제적 조치보다도 방역이다. 유럽과 미국에서 확산세가 지속되고, 14억 인구의 인도까지 타격을 입고 있다. 희망 섞인 이야기지만 상반기 이내로 사태가 진정되면, 하반기부터는 경제가 반등할 수도 있다. 하지만 1997년이나 2008년처럼 ‘V 자형’ 반등을 기대하긴 어렵다. 우리나라는 이전부터 잠재 성장률이 감소하면서 경제 체질이 악화된 상태. 기저질환이 있는 채로 감염병에 걸리면, 회복세가 더디지 않나? 마찬가지로. 현재 위기는 우리 경제가 감내하기 힘든 정도다. 복원력이 나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분위기면 ‘U 자형’ 반등을 예상한다.”

한국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하려면.

“노동 개혁과 규제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 현재 기업의 경영 환경이 척박해 기업 활동하기 어려운 구조다. 정부가 기업을 대하는 정책이 변해야 시장이 반응한다. 최근 들어 시중에 유동성이 적지 않은데도 돈이 잘 돌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수혈량이 아니라 혈관이 모자란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을 위한 조언 한마디.

“정책의 정치화가 과도한 상황이다. 선거를 앞두고 단기적인 포퓰리즘 공약으로 접근해서는 국가 미래가 어둡다. 미래 세대의 재정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현재 전 세계 국가의 각자도생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한국이 방심하지 않고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예컨대 해외 투자자들은 우리나라를 두고 재정으로 공무원 수를 확대하는 국가가 메리트 있냐고 묻곤 한다. 국가 지도자의 비전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다.”